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128
----------	------

제안일자 : 2025년 8월 27일
제안자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장

1. 주 문

- 마약 범죄 확산과 함께 해외여행객이 마약 투약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마저 발생해 국민 불안 커지고 있기에, 해외 입국 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여 마약 복용자를 조기 차단하고 내국인은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 불허 및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 확산과 청소년 접근 용이성, 특히 마약 투약 상태의 해외여행객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마약의 국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한민국 입국 단계에서부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법률 개정은 마약 복용자를 조기에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출입국관리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 송 처

가. 국회, 법무부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며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청소년들마저 마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23년 11월에는 해외 여행객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상문을 열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마약 소지 전수 검사 시행을 포함해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막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마약청정도시 서울’,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 방법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사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구체화하고, 마약 우범국가·노선 또는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선별 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입국장 단계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또한 검사와 조치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오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재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마약 복용자를 신속히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내 유입 경로를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조치가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국내외에 알려지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 이미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